

행정통합 마중물 20조원 확보·활용방안 짜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하려면 '이것부터'

(2) 재정 자율성 제도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을 설계할 지, 전남 시군에 비해 재정 자율성이 열악한 광주 5개 구의 재원 배분은 어떻게 할 지 등 과제가 만만찮다.

민행매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은 최대한 활용하되, 통합 특별시 스스로 지속 가능한 재정과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국비 사업에 의존해 온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넘어,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미래 산업과 지역 현안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슈퍼 광역경제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매년 5조 원씩, 4년 동안 총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는 통합특별시의 기틀을 다지는 것은 물론, 타 지역의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의 나침반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4년간 한시 지원인 만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체질과 향후 재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20조원의 80%인 16조를 미래를 위한 산업 투자에 쓰겠다"고 밝혔다. 투자공사나 전담 투자 기구를 만들어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 지원금에 지방채·민자·정책금융을 결합해 '재정+금융 패키지'를 만드는 방식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 담보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자원은 낙후된 지

연간 5조 규모 재정 인센티브 활용처, 행정통합 시험대 불확실성 속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행정력 입증' 척도 광주 5개 자치구 보통교부세 형평성 문제 해결도 숙제

역 인프라를 개선할 단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통합 특별법에 '재정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데다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계다가 시·도가 요청한 행정통합에 필요한 실무예산 573억원이 지난 4월 국회 추경에서 누락되면서 정부의 지원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 당선인은 취임 직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다. 확보된 재원도 언제,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체질과 향후 재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 당선인은 일명 '20조원 특위'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민 당선인은 "(정부의 4년간 20조원 지원) 약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20조원 규모 통합 인센티브, 2차 공공기관 이전,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관련 국책 사업 연계를 핵심 의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살림으로 불리는 보통교부세 배분 구조 방안도 풀어야 할 문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복지와 도로 보수, 인건비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치구는 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 현재는 광주시가 이 보통교부세를 일괄 수령한 뒤 예산 일부를 5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하고 있다. 반면, 전남 22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수령한다.

실제 인구 42만명인 광주 북구의 경우 지난해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보통교부세는 0원이었다. 광주시가 받은 교부세 중 일부를 떼어준 조정교부금 1165억원이 전부다.

이에 반해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등 보통교부세 4500억원을 직접 수령했다. 여기에 추가로 조정교부금 420억원을 더 받았다. 북구의 인구가 더 많음에도 실제 손에 쥐는 자율 재원은 수천억 원의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같은 격차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행정안전부가 광역시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아닌 '본청'을 기준으로 재정을 통틀어 계산해 일괄 교부하기 때문이다. 광역시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 8만 869명으로, 시 단위는 연평균 3813억원, 군 단위는 2645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에 내려진 평균 조정교부금은 193억원이다. 전남 5개 시는 연간 4006억원, 17개 군은 2838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은 셈이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평균 인구수가

27만8402명인 데 비해, 평균 866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인구가 3만~5만 명인 군 단위보다 인구는 몇 배 많지만 전체 예산은 비슷하거나 적다.

문제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때문에 당시 구청장들은 시·군·구의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다른 자치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말 열리는 민선 8기 마지막 회의에서 보통교부세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특별시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 20조원 재원의 성격과 확보 방식, 산업투자 배분, 중앙정부 협의 전략, 자치구 재정 소외 해소 등이 대전환기 회의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지난 12일 결의문을 통해 "초대 원구성 선거가 어떠한 부정이나 불공정도 개입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공명선거 실현 의지를 밝혔다.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 "공명선거 실천" 결의

초대 원구성 앞두고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다짐

전남도의회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이 초대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지난 12일 결의문을 통해 "초대 원구성 선거가 어떠한 부정이나 불공정도 개입되

지 않은 가운데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가 통합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확대된 행정체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

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인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선거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결의문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의정단 선거문화 정착 △비방과 흑색선전 배격 및 상호 존중과 화합의 의회문화 조성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역

량 중심의 의정단 선출 △선거 결과 존중과 협력 기반의 의정활동 실천 등을 약속했다.

또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특별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선인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역사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의회 문화를 선도하고 특별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김대중 망명 투쟁 기록' 공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관장 김경현)은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시절 작성했던 서한문과 언론 기사 자료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지난 4월도 모하트 시노다 일본 국제대 교수로부터 기증받은 198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시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에게 보낸 서한문과 동봉한 한국인권 문제연구소 소식지에 게재된 입장문 '기묘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나의 견해와 제안', 미 유력 신문의 관련 기사 등이다. 1980년 미국 망명 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나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는 불굴의 신념으로 한국의 민주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 내 주요 인사들에 대해 끊임없는 설득과 여론조성작업을 벌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개된 입장문 '기묘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나의 견해와 제안'은 귀국 후 한국정당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평화민주당 창당 등 향후 '김대중 정치'를 내다볼 수 있는 선언문이었다. 1997년 대통령선거 당선과 햇볕정책,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는 로드맵이 됐다.

장신기연세대김대중도서관박사는 "망명 시기 김대중 선생은 한국의 민주회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향한 설득작업, 여론조성 작업을 했다"며 "이 자료들은 이것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선 9기 준비 본격화

서영학 인수위 여수 미래 청사진 그린다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본격 활동

서영학 전남 여수시장 당선인(사진)의 민선 9기 시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위원회는 최근 전남스포츠센터에서 현판식과 출범식을 열고 여수시 주요 현안 점검과 공약 이행 방안 구체화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분야별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하며 민선 9기 핵심 정책과 시정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수시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회복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 2026여수세 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등 지역의 미

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검토 결과를 종합해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행정과 산업, 인공지능(AI), 환경, 문화,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과학기술과 정책·법률 분야 자문단도 구성돼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영학 당선인은 "기획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수정 당선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환영"

산업지도 바꿀 미래 핵심공간으로 북구 첨단3지구 강조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북구구청장 당선인(사진)이 삼성전자의 광주 첨단3지구 반도체 공장 추진 소식에 대해 "북구와 전남광주의 산업지도를 바꿀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수정 당선인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식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첨단산업의 성장축이 남부권으로 확장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무대로 올라서는 의미 있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 추진 소식은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이 구체화 되는 뜻깊은 성과"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 주도 성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 방향이 실행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첨

단3지구가 꼽히는 것에 대해 "첨단3지구는 북구의 미래성장 이끌 핵심공간"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추진과 엔코 테크놀로지코리아 증설이 더해지면, 북구는 고부가가치 미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흐름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북구 첨단 중심 AI 산업 허브' 구상을 현실로 앞당길 소중한 기회"라며 "북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성장축이 되는 중심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우승희 군정 2기, 공약 실행체계 구축 나서

부서별 추진 방향 집중 점검·행정 공백 최소화

우승희 영암군수(사진)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별도 인수위원회 없이 공약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군정 준비에 나섰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 낭산실에서 우승희 군수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항 추진 방향 회의'를 열고 주요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부서별 추진 체계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별도의 인수위원회 구성 대신 실무 부서 중심의 공약 검토 체계를 가동해 정책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우 군수의 대표 공약인 '영

암형 기본서비스 5대 공약'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월 15만원 규모의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및 에너지 기본소득을 비롯해 통합돌봄 모델 구축, 농·진·집·우 리아이자립펀드를 연계한 공공은행 설립, 청년 등록금·주거·일자리 책임제, 통합교통서비스 구축 등이다.

경제·에너지 분야에서는 자본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검토됐다. 이외에도 에너지·농축산업·청년·노동·복지·문화·관광·정주여건 분야 과제도 논의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